

權 亨 禮 議 員

“건강한 가정과 사회는
곧 대전시의 경쟁력입니다.”

국민중심당 비례대표

국민중심당 비례대표 교육사회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미래의 꿈과 소망을 일궈가고 계신 150만 시민 여러분과 김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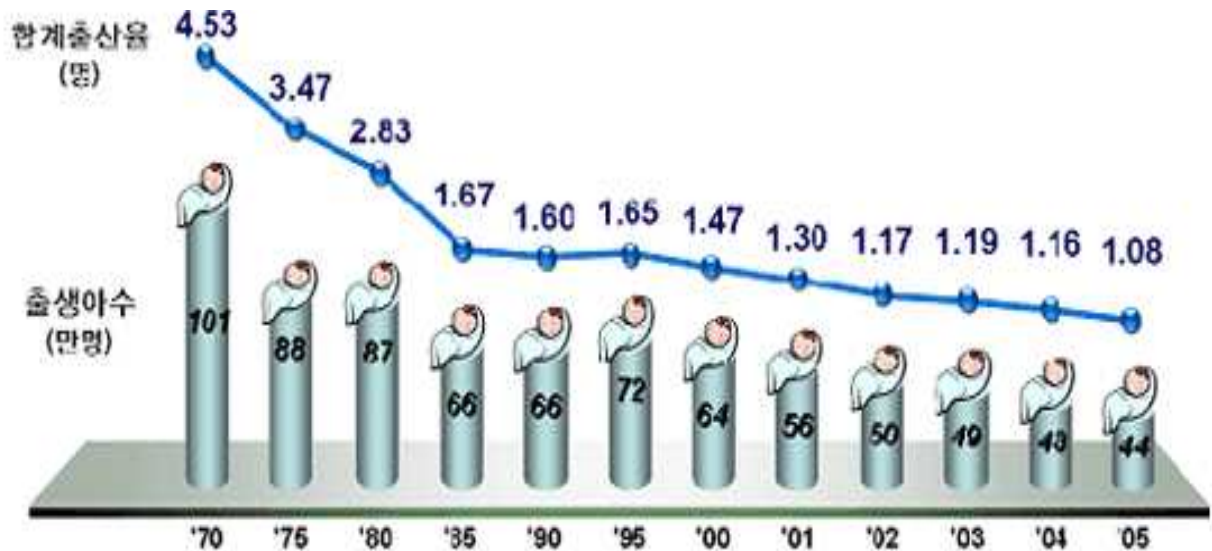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박성호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 질문을 통해 날로 치열해져 가는 자치단체간 경쟁 속에서 우리 대전시가 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강한 가정과 사회”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하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과 관련한 대전시의 대책 방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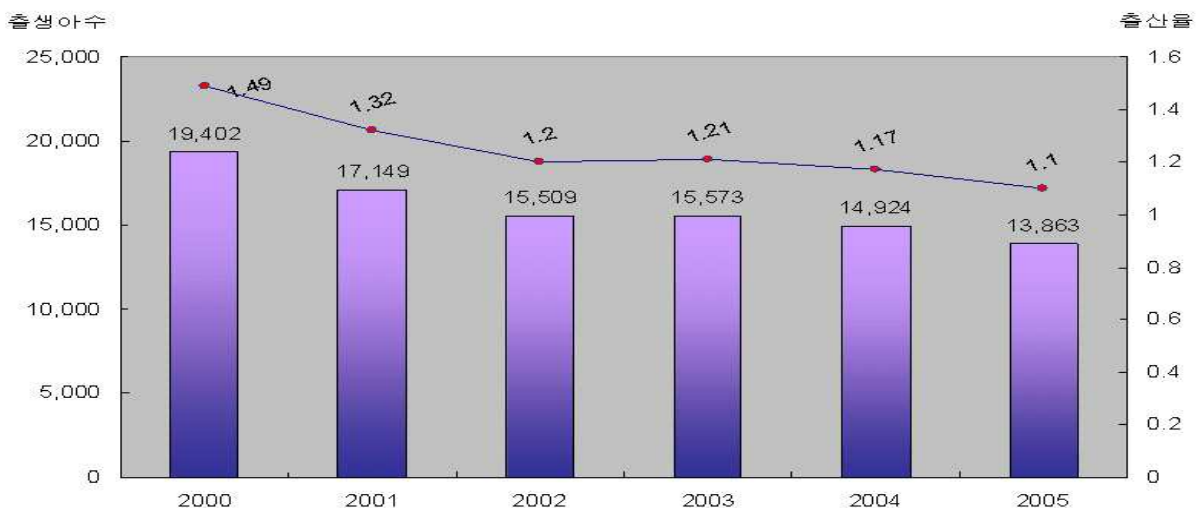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인구가 최대로 되었다가 줄어드는 시기가 2018년으로 지난 해 발표한 2020년보다 2년이 앞당겨졌습니다. 이는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림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대전시 역시 2000년보다 5,539명이 줄어 2005년 총출생아수가 13,863명이며, 출산율은 2000년에 1.49명에서 1.1명으로 저출산 심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2〉 대전시 출생아 수 및 출산율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을 점차 감소시켜 노인 부양부담이 2005년 약 8명당 노인 1명에서 2050년엔 1.4명당 노인 1명으로 줄어들어 부양부담이 더욱 커지며,

15세~64세 인구가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의 노년 부양비도 2005년 12.6%에서 2050년 72.0%로 6배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림3〉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통계청의 발표는 다시 한번 우리사회에 사회적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금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인구정책이라는 점에서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사회 파급 영향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경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꼼꼼이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럽 국가 중 출산율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 내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들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데 주력하고,

동시에 일하는 여성들에게도 육아 휴직 및 육아 시설을 제공하여 2000년에는 출산율 1.89명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1〉 유럽의 저출산 정책 비교

대표국가	정책유형	성평등과 지향가족모델	주요정책	출산율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성별분업 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gender equality)정책 ·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 2인 소득가구 지향 · 일과 가족 양립 지원 	가족수당 출산모성휴가 공공 육아시설(0-3세) 공공 육아시설(3-6세)	높음 안정 추세
프랑스	성별분업 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 가족 / 친 출산 정책 · 생계부양자-전업주부 가족지원 및 2인 소득가구 지원 	가족수당 육아휴직	높음 상향 추세
영국	성 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지향 여부에 무관심 · 개인주의화된 가족 	세율인하	중간 안정 추세
독일 스페인	전통적 성별분업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성역할 유지 · 여성의 어머니 역할 강조 · 생계부양자-전업주부 가족모델 · 여성의 일 / 가족 양립 어려움 	공공 육아시설(3-6세)	낮음 하락 추세

따라서 본 의원은 이미 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의 출산 관련 정책을 젠더 관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현상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6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지자체 출산지원시책 관련 지침」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주민의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출산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시·도의 경우 저출산 대책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전시의 경우 복지지원 담당부서에서 저출산 고령화 업무를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2〉 타시도 저출산 대책 담당부서 현황

타 시 도	전 담 부 서 현 황
부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실 - 여성정책담당관실 - 저출산대책담당
대구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정책총괄, - 고령사회대책, - 저출산대책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 노인복지과 - 저출산고령화대책
충 남	복지환경국 - 복지정책과 - 저출산고령화담당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

또한 타시·도의 경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중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 표 3 〉 타 시 · 도 출 산 장 려 정 책 현 황

지방자치단체		정 책	지 원 내 역		시 행 일
부산광역시		출산축하금	10만원—20만원 : 셋째아부터		'06 → '07
대구광역시		출산축하금	30만원	셋째아부터	'07
울산광역시		출산장려금	30만원	셋째아부터	'07
충 북		출산장려금	월 10만원 월 15만원	둘째아(1년간지원) 셋째아(1년간지원)	'07
충 남	천 안	출 산 장 려 금	50만원	셋째아 부터	'05. 5. 30
	공 주	출산양육지원금	50만원 80만원	둘째아 셋째아 부터	'05. 8. 1 '06. 5. 11
	보 령	출 산 장 려 금	50만원 80만원	둘째아 셋째아 부터	'05. 5. 26
	아 산	출 산 장 려 금	30만원 60만원	둘째아 셋째아 부터	'06. 5. 15
	서 산	신생아출산지원금	30만원 100만원	첫째·둘째아 셋째아 부터	'04. 4. 10 '06. 12. 29
	논 산	출 산 지 원 금	30만원 100만원	첫째·둘째아 셋째아 부터	'06. 12. 31
	계 룡	출 산 장 려 금	50만원	둘째아 부터	'05. 1. 1
	금 산	출 산 장 려 금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부터	'07. 4. 30
	연 기	출 산 장 려 금	50만원	첫째아 부터	'05. 5. 12 '06. 8. 10
	부 여	출 산 장 려 금	50만원 100만원	둘째아이 셋째아 부터	'05. 5. 28
	서 천	출 산 수 당	30만원 80만원	첫째·둘째아 셋째아 부터	'05. 2. 23
			20만원	첫째아 부터	"
	청 양	출 산 지 원 금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부터	'05. 1. 1 '07. 4. 20
	홍 성	출 산 장 려 금	30만원 50만원	첫째아 둘째아 부터	'03. 12. 30
	태 안	신생아출산장려금	50만원 100만원	첫째·둘째아 셋째아 부터	'05. 5. 30 '06. 12. 29
	예 산	신생아육아용품구입비	30만원 50만원 300만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부터	'04. 4. 9 '07. 5. 1
	당 진	신생아육아용품구입 지원비	20만원 30만원 100만원 200만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부터	'05. 2. 15 '07. 1. 23
전 북		출산지원금	20만원 30만원 500만원	첫째아·둘째아 셋째아·넷째아 다섯째아 이상	2007년
경 북		출산장려금	월 10만원 월 20만원	둘째아(1년간지원) 셋째아(1년간지원)	2007년

그러나 2007년 대전시 자체 추진시책을 살펴보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으로 경제적 지원 없이 형식적인 지원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표4〉 대전시 자체 추진시책

	추진과제	시기	추진부서
1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07. 상반기	복지정책과
2	다자녀가정 분양아파트 우선입주권 부여	'07. 상반기	건축과, 도시개발공사
3	다자녀 모범가정 및 가족친화기업 시상	'07. 5월	여성가족청소년과
4	대중교통시설내 「임산부 좌석제」 도입	'07. 상반기	대중교통과
5	대중이용시설내 임산부 전용(우대)창구 설치	연중	복지정책과
6	임산부·다자녀가정 여권발급 우대창구 운영	'07. 3월	시민봉사실
7	희망보직제 도입 운영	연중	인력개발과
8	출산휴가·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지원	“	“
9	공무원 포상시 우대	“	“
10	공무원 아파트 입주 신청시 우선권 부여	“	“
11	다자녀공무원 해외파견 근무 우대	“	“
12	패밀리데이 운영 활성화	“	자치행정과
13	임신 공무원 당직제외	'07. 상반기	“
14	만 5세미만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07. 하반기	“
15	맞벌이 부부 탄력근무제 운영	연중	“
16	유아동승 및 임신공무원 승용차요일제 면제	'07. 상반기	회계계약과
17	미혼 남·여 결혼정보센터 운영	'07. 하반기	여성가족청소년과
18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강좌개설 운영	연중	공무원교육원
19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07. 하반기	복지정책과
20	저출산·가족친화 사회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전개	연중	보건위생과
21	시민참여 및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	복지정책과
22	기업의 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	“	기업지원팀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상 가장 중요한 1년의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육아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낼 수 없는 풍토와 부서원들의 눈치로 인해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전시청의 경우 육아휴직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공무원 486명 중에서 2003년 1명, 2004년 2명, 2005년 0명, 2006년 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전시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담당부서 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호주사람들에게 왜 출산율이 증가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4000호주달러(한화 약 300만원)의 베이비보너스 때문이라고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이와 같이 타시·도의 경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데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 내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들에게는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과 동시에 일하는 여성들 중 먼저 대전시청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을 확대해 나아갈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곤아동을 위한 대책입니다.

아동 빈곤율은 1996년에 3.6%이던 것이 2000년에는 7.7%, 2004년에는 8.8%로 나타나 IMF 경제위기가 진정된 2000년 이후 최근 4년 동안에도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한국사회에서의 빈곤아동이 단순한 경제결핍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생활의 불편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제 한국사회에서의 빈곤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마저 제공받지 못하는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4년 최선희·김희수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질병발생율 1.4배, 학력부진 비율 2.2배, 술·담배 등 비행행동 2배, 가출 2배가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사회에서 아동 개개인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빈곤가정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적자본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제공받지 못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미국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는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성취, 복지수급 등의 측면에서 \$1 투자에 대해 최대 \$7.14의 환원효과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는 빈곤세습의 고리를 단절하고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향후 사회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미래적 가치는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16개 시·군·구에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희망스타트 사업을 1년에 3억원씩 전액국비로 3년간 지원을 하고,

공무원 3인이상 희망스타트 전담팀을 구성하여 임산부 및 빈곤아동에게 프로그램상의 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4〉 희망스타트 시범지역



현재 대전시 빈곤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12세이하 아동 246,490명 중 14,372명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5〉 시·도별 빈곤아동 현황

시·도	12세이하 아동	빈곤아동				일반아동
		소 계	기초수급자	의료특례	모·부자가정	
계	7,164,407 (100%)	403,776 (5.6%)	245,827 (3.4%)	103,051 (1.4%)	54,898 (0.8%)	6,760,632 (94.4%)
서울	1,291,741	59,939	42,758	6,393	10,788	1,231,801
부산	473,975	26,182	16,558	4,956	4,668	447,793
대구	378,038	17,055	12,080	2,862	2,113	360,983
인천	411,316	19,584	10,781	4,305	4,498	391,732
광주	258,850	48,252	29,567	16,443	2,242	210,598
대전	246,490	14,372	7,111	3,928	3,333	232,118
울산	193,504	4,984	2,994	856	1,134	188,520
경기	1,467,683	36,026	23,091	10,273	2,662	1,431,657
강원	225,661	13,189	8,371	3,187	1,631	212,472
충북	339,545	20,709	11,024	6,116	3,569	318,836
충남	310,788	24,008	21,050	49	2,909	286,780
전북	290,034	31,536	16,710	12,341	2,485	258,498
전남	284,506	33,668	14,372	14,894	4,402	250,838
경북	385,997	22,204	12,988	6,882	2,334	363,793
경남	518,670	24,056	13,027	6,870	4,159	494,616
제주	87,609	8,012	3,345	2,696	1,971	79,597

자료 : 보건복지부. 2006.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동복지에 관한 전반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공공무원으로 아동복지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회복지 전공인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에 의해서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 중 빈곤층의 아동들에게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Happy Start 운동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빈곤아동에 대한 조사 및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및 통합지원 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시정 역점 사업인 무지개 프로젝트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저소득층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려 더불어 잘사는 사회공동체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시범 사업에 지원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금이라도 빈곤아동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0~12세 빈곤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 사회내 서비스 개발과 통합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 장사정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시 장사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대전시는 교통·국방·행정의 중심도시로 국립현충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학적 입지조건으로 인해 우리시 공설 화장장은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지역 이용자도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화장장은 타 지역에 비해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제152회 정례회 당시 존경하는 김재경 의원님과 제162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 또한 이 사안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명확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근무태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 장사정책과 최근 확정된 공설 화장장 현대화 사업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6〉에 나타난 것처럼 공설묘지는 만장에 이르렀고, 공설 화장장은 그 설치시기가 30년이 지나 규모나 편의시설 면에서 매우 열악해 질 높은 장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표6〉 대전시 주요 장사시설 현황

구 분	위 치	면 적		규 모		설 치
		부 지	건 물			
공설화장장	서구 정림동 산 2-3번지	8,728㎡	634㎡	7기(화장)/1기(소각)	28구(화장)	1976. 2. 1
공설납골당	서구 괴곡동 산55번지	- (1관)	990㎡	18,016위(능력)	14,161위(봉안)	1995.10. 7
		- (2관)	1,380㎡	20,000위(능력)	-	2006.12.13
공 설 묘 지	서구 괴곡동 산55번지	499,440㎡	333㎡	14,400기(매장능력)	10,423(기매장)	1968. 3.23

또한, 〈표7〉에 나타난 것처럼 주요 6대 도시별 화장장 시설 및 화장률 현황을 보면 대전시는 타 지역에 비해 화장률이 저조할 뿐더러 화장로 추가증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7〉 6대도시 화장장 현황

(2006. 12. 31 기준)

구 분	총인구수 (천명)	면 적		규 모		1일평균 화장건수	화장률
		부지(㎡)	건물(㎡)	화장로(기)	납골당(위)		
서울특별시 장묘문화센터	10,293	297,462	8,732	23	119,311	66	68.6%
부산광역시 영락공원	3,657	69,027	2,797	15	66,230	48	78.0%
대구광역시 장묘운영센터	2,528	45,349	1,814	9	29,660	25	53.8%
인천광역시 장묘공원관리소	2,644	11,965	3,194	15	25,764	33	70.3%
광주광역시 영락공원	1,406	7,343	1,230	5	15,000	22	41.5%
대전광역시 장묘사업소	1,491	8,728	634	7	38,016	24	50.0%
울산광역시 공설 화장장	1,099	3,041	622	4	-	7	67.0%

최근, 타시·도의 장사단지 조성 사례를 보면, 최근 5년간 시 외곽에 최신식 장사종합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나타나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경우 장사종합단지 조성 추진에 있어 2004년 용역결과는 무시되고 현 계획대로 사업이 급선회하게 되었고, 일부 주민의 넘비적 집단행동이 있다고 하여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행정이 반복된다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또한 서남부권 개발과 차기 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다시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시장의 명확한 사업추진 의지와 방향에 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설화장장 현대화 사업 추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의 주요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의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도시의 50년, 100년 대계를 전망하고 도시의 장기발전 전략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4년 장사단지 입지평가에서 현 정림동 입지는 생태계보전, 시공성, 인구분포 등에서 타 입지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되어 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여러 문제점들에 직면함은 물론,

직·간접적인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뒤 따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도시미관 및 도시공간 활용의 제약, 월평공원 환경파괴 문제, 신·구 민원 발생, 기존시설 내 공사로 인한 시공의 난이성과 사업비 증가 등이 예상됩니다.

특히, 현 위치에 장사종합단지가 조성될 경우에는 정림동 일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장사종합단지가 아닌 화장장 시설로만 조성된다면 화장장과 납골당이 이원화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비효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심권내에 장사단지가 조성됨에 따른 선진 시민의식 고취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설화장장 이용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충남도민의 이용률이 매년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올해 개정된 「장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공동수립”과 동법 제36조 제2항인 “비용의 보조” 규정에 따라,

시장께서는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상호발전적 장사시설
수급계획 및 예산보조 등에 관해 정책협의를 적극 나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푸른 숲 가꾸기 사업과 접목시켜 정책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봉산 숲 복원에 관한 것으로 대전시 8경인 구봉산은 현재
공설 제1, 2납골당이 위치해 있고, 499,440m²에 달하는 공설
묘지가 산재해 있어 흉물스럽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사법에 의해 15년씩 3회 연장을 해주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지금부터 연장보다는 방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납골 또는 수목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존의 묘지를
재정비하여 구봉산 숲을 복원해 나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가족 해체와 사회적 무관심속에 우리사회의
희망인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때로는 피해자로
피해를 입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
하나 무엇보다 입시위주의 성적 지상주의와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교육환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나름대로 학교폭력 근절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시의 학교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폭력가해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발생 건수와 폭력피해 학생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자연령화로 초등학생 폭력건수의 증가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표8〉 학교폭력 발생 현황

구 분	2005년도			2006년도			비 고
	발생 건수	관련 학생수(명)		발생 건수	관련 학생수(명)		
		가해	피해		가해	피해	
초등학교	1	1	1	7	7	12	
중 학 교	43	143	113	50	67	238	
고등학교	33	100	31	44	89	63	
계	77	244	145	101	163	313	

〈표9〉 대전시 학교폭력 유형별 가해학생 처벌 분석현황

(2006년)

유 형	학교폭력 발생건수	가 해 학생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조치 학생수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조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신 체 폭 행	64	87	15	5		2	31	19	11	3	1
협 박	6	8	4			1	3				
금 품 갈 취	19	25	2	5		2	12	3	1		
집 단 괴 롭 힘	7	34	7	6		1	12	7	1		
기 타	5	9	1	1	1		6				
계	101	163	29	17	1	6	64	29	13	3	1

또한 2007년 3월30일자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신문에
게재된 집단폭행, 보복폭행, ‘조폭 뺨치는 학교폭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남녀 중학생 16명이 무더기로 검거된 내용으로 날로
학교폭력이 조직화되고 잔인하며 반인륜적인 양태를 나타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와 어머니경찰대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순찰을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취약시간대에 112 순찰차를 배치하는 등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책을 마련
한다고 하여 “과연 학교폭력이 근절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뚜렷한 교육이념과 목적의식 없이 대학진학만을 위한
치열한 입시제도는 대다수의 학생에게 다른 선택을 배제
하고 오로지 입시에만 매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인성교육의 부재는 인격형성이 올바르게 성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시키고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음성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적법하게 대처한 교사나 학교 측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폭력 문제해결 과정에서 외부의 전문인력이나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근절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모니터링과 감시를 위해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과의 일원화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폭력의 유관기관인 교육청·학교·경찰·학부모 등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신고·상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실 용의나 추진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